

‘정의로운 통합’ 방점... “길어져도 깨끗이 치료해야”

계엄 1년 **李**대통령 키워드

‘청산·단죄 전제한 통합’ 입장 강조
“우연 하나만 틀어졌어도 계엄 성공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진압하는 것”
추가 특검에도 긍정적 시각 내비쳐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온전한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에 대해 “통합이 아닌 통합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개를 훑치던 독재에게 통합의 명분으로 ‘50개씩만 훑치라’고 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라며 “정의로운 통합이란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법률과 도덕에 기반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길을) 함께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이에 대한 단죄까지 이름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민주주의적 원칙을 바로 세운 뒤에야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가담자들을 가혹하게 끝까지 엄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깊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무거은 처벌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에 단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과정이 다소 길어져 진통을 겪더라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있다면 그건 무능한 것이겠지만,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느냐”며 “나라의 근본에 관한 이 문제는 철저히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비유적으로 암을 언급한 데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그만큼 심각한 ‘정치적 질병’이었다는 판단과 함께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엿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생각해보라. 12월3일 밤 수없이 많은 우연이 겹쳐 계엄을 저지했다”며 “정말 우연스러워 보이던 단 한 가지만 틀어졌더라도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혹여 국회로 향하는 행의 상공 진입을 조기에 허용했다면, 파견된 계엄군 중에 단 한 사람이 개머리판이라도 휘둘렀다면, 실탄이라도 지급했다면, 하나의 우연만 비켜 나갔어도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의 치열한 힘으로, ‘하느님이 보우하사’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는 이런 위험을 후대들이 겪게 해선 안 된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가 진행한 ‘적폐 청산’과 비교하는 질문에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다”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추가 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긍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고 넘어가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보나마나 또 특별수사본부든 뭐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그것을 과연 이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수술을 깔끔하게 빨리 잘 끝내야 하는데 수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기관의 수사로 정치적인 논란을 키우기 보다는 그나마 독립적인 특검에게 추가 수사도 맡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주철현·정진욱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

朱 ‘석유화학산업특별법’ 경쟁력 강화

丁 ‘벤처법’ 모태펀드 존속기간 영구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지난 2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시켰고, 공약을 반영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선제적으로 발의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여수와 울산·충남 서산 등 석유화학산업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호남발전특위에서 활동하며 정청래 당대표 등에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 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도 통합·간소화했다.

또한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위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 재편을 위한 공동 행위를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이 신속히 마무리되고 고부가 스페셜티 중심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수국가산단을 소부장 특화단지화 RE100 산단으로 지정해 국가기간산업의 중추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벤처투자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인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영구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모태펀드 종료 시한(2035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AI·딥테크·지역 벤처 등 장기·고위험 분야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 벤처투자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주요 내용은 ▲존속기간 대통령령 위임 ▲조합원 총회 승인 통한 10년 단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국회사전보고 의무 신설 등이다. 지난 법안소위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정의위원이 제안한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 ‘10년 단위 연장 구조’ 등 핵심 원칙이 대안입법의 중심에 그대로 반영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모태펀드가 흔들리면 한국 벤처투자 시장 전체가 흔들린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펀드의 기반을 새로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문금주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 감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개 법안은 농어민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각종 세제 지원의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농·영어용 기자재, 농어업법인, 관련 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4년 연장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농어촌주택과 영농·영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동일하게 4년 연장함으로써 현장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도록 설계됐다.

/김진수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